

한국의 작업장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작업장 혁신과 혁신 촉진정책—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의 모든 나라 경제가 2008년 8월 말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높게 치솟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믿었던 펀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세계적 공황급 위기로 발전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첨단기법이 개발된다고 실물경제에서 실질적인 가치창출 없이 금융서비스가 부를 자가증식하는 것은 결코 아님이 드러났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부(富)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증대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만을 갖추어 놓는다고 경제성장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혁신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꽃 필 수 있는 것이다(William Lazonick, 2003).¹⁾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평범한 사실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살아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굴뚝산업으로 간주된 지엠(GM)과 포드

1) Lazonick, William(2003), "The Theory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 Foundations of Innovative Enterprise,"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24(1), pp.9~44.

(Ford)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제대로 혁신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제 미국 자동차산업은 생존을 위해 미국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같은 미국에서도 항공기 제작이나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져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추어 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을 해 왔다. 일본의 제조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엔고와 장기불황 속에서 더욱 혁신을 하며 단련되었고,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작업장 수준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면 대체로 과학기술의 혁신, 발명,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개발,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개발 등,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혁신에는 이와 같은 기술혁신 이외에도 사회적 혁신으로서 작업장 혁신이 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혁신에 사회적 혁신이 결합될 때 그 효과가 최고로 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혁신은 대부분 일반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 즉 작업장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얼마나 새롭고, 효율적이며, 정성을 들여 그리고 개선을 해 가면서 일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독일이나 일본이 제조업에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 수출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작업장 혁신으로 얻은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업들도 중국과의 가격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장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장 혁신은 엔지니어 중심, 기술혁신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혁신으로서 작업장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역으로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 기업, 산업,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큰 것이다.

각국의 혁신활동은 대체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내며 혁신을 잘하는 대기업들의 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다수가 혁신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부재, 생존에 급급한 사정 등으로 필요한 작업장 혁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고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작업장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펴 왔다. 정부 수준에서 그런 지원정책

을 활발하게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들이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고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일본도 포함된다.

지난 10월 23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한 ‘작업장 혁신 국제세미나’에서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 혹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작업장 혁신 사례와 작업장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각국은 중소기업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통해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이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정부는 각 기업들의 작업장 혁신의 정도를 진단해 주거나 혹은 작업장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네트워킹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에 뉴패러다임센터를 두고 직접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료로 교대조 개편, 학습조직화, 작업장 혁신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작업장 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컨설팅의 확대, 국내외의 혁신 사례 소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작업장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산업, 국가만이 위기가 끝나고 호황기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다. **KLI**